

종합

광주·전남 결혼 70년 동안 2배 줄었다

일제 강점기 광주·전남에서는 전체 인구의 2%인 4만4천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했으며, 호습기질환과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0년간 광주·전남의 혼인율은 크게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이혼율은 5배 가량 높아지는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713명으로, 현재 인구(4천845만6천369명)의 31.5% 수준이다. 전남은 70년 전 인구가 227만8천787명으로, 남한 인구의 14.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본인 거주자는 4만4천341명에 달했다.

1,000명당 1938년 10건→2006년 5건 10명중 5명 호습기·전염병으로 숨져

혼인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이 9.77에 달했다. 이는 2006년 전남의 조혼인율(5.4)보다 4.3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70년새 혼인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로드맵 내달 초 확정

나주 등 혁신도시 차질 우려

일부 기업 분사 지방이전 거부 가능성 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계없이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에 대한 로드맵을 설 연휴 이전인 다음달 초까지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이전 계획에 관계없이 진행되며 설 연휴 이전인 다음달 초순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팀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난 18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라며 "그때까지 공기업 민영화를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작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이에 공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의 수정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앞서 민영화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다 민영화와 이월될 경우 일부 기업이 본사의 지방이전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폐지와 토공과 주공의 통합설로 전북도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전 민영화의 경우 정계와 재계에서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리 쉽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수위 내에서는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정도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쪽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4월 총선이 여당인 한나라당 압승으로 귀결될 경우, 한전 등을 포함한 많은 수의 공기업이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당선인, '우생순' 관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 한 극장에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핸드볼대표팀의 우승을 극화한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영화 관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주연배우 김정은, 엄태웅, 심재명 제작자, 이 당선인, 조은지, 김지영. /연합뉴스

이 당선인 24일 광주 방문

정·재계 인사 200여명 초청... 민생 탐방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민생과 지자체 현안점검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광주를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재계 인사 등 200여명도 초청된다. 그러나 이 당선인 측의 일정 변경도 예상되고 있어 간담회가 아닌 호남권 민생 현장방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당선인이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는데 이어 첫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한 것은 경제살리기와 함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의 지방투어는 전국을 4, 5개로 나눠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짜여지며, 이 당선인은 22일 전국 시·도지사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를 따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선인의 방문에 맞춰 '세계 문화상품단지 조성', '노인 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등 당선인의 11대 공약의 조기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서남해안 관광·해양레저 거점 육성', '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 13대 공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교 시절 노력이 평생 좌우"

새 정부서 장관 유임 제의 받은 적 없다

김장수국방 광주일고 방문



'꽃장수'로 유명한 김장수(60·사직) 국방부장관이 지난 18일 모교인 광주일고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나 군사 경영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먼저 만드는 기업이 가격대와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교를 나와 광주서중·일고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기생 20여명과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일고를 방문한 김 장관은 교정에 마련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헌화한 뒤 강당에서 재학생 300여명과 '후배와의 대화'를 가졌다.

김 장관은 "기업이나 군사 경영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먼저 만드는 기업이 가격대와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교를 나와 광주서중·일고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기생 20여명과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목고 설립·운영 자율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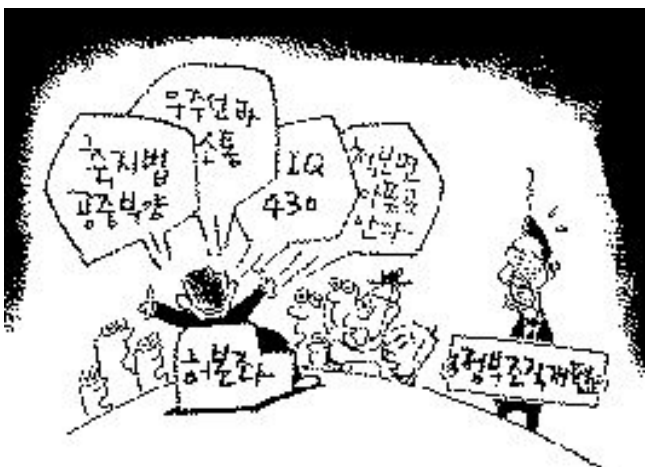
사전협의제 폐지 검토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침에 따라 특목고 사전협의제, 외고 자연계합 운영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업무의 지자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운영의 자율화이다.

년 3월에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됐으나 전국적으로 외고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 과열 조짐이 일자 교육부는 2006년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감이 특목고 설립을 결정할 때 교육부와 반드시 사전협의제를 거쳐도록 했다. 특목고 설립의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특목고가 사교육 유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었던 만큼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을 '불허'하는 조치로 해석돼 왔다.

빛의만평

- 김중두



이거야 원...

산행안내 (Hiking Guide)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and trails with dates and descriptions.

금당부동산 (Geum-dang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including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사찰(절) 및 사찰부지 (Temples and Temple Sites) listing various temples and their locations, including histor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E-Supporter 어학원 (E-Supporter Language Academy) advertisement for English learning courses, featuring a table of cours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